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관리실태 -
특 정 감 사 결 과 보 고 서



2024. 11.

감 사 위 원 회
[감 사 2 과]

■ 목 차 ■

I . 감사개요	1
II . 감사대상 업무현황	1
III . 감사결과	3
1. 감사총평	3
2. 지적사항 총괄	4
3. 주요 지적사항	5
IV . 도민감사관 주요 활동내역	14
V . 향후계획	15
【붙임】	
1. 현장조사 확인사항	16
2. 동일차량 수집·운반증 중복등록 현황	18
【별첨】	
1. 처분요구서 각 1부.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관리실태 -

특 정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보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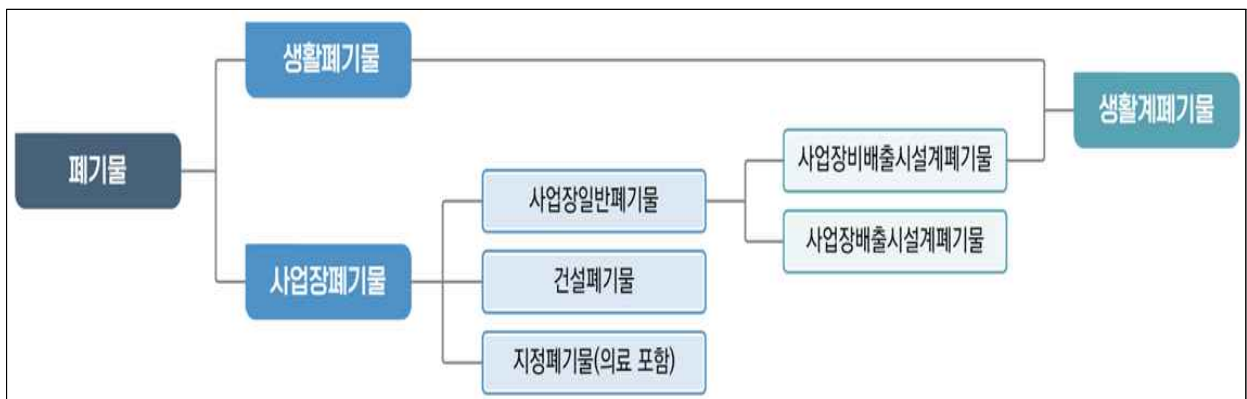
↳ 2023년 공익제보¹⁾(환경분야)에 따라 2024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

I |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4. 9. 4.(수) ~ 2024. 9. 30.(월)
- (감사대상) 31개 시·군 [현장감사²⁾ : 6개 시(용인, 화성, 평택, 고양, 파주, 김포)]
- (감 사 반) 감사2과장 등 7명(공무원 5 / 도민감사관 2)
- (감사방법) 현장감사(건설폐기물 관련 업체) 및 서류감사(31개 시·군 제출자료)
- (감사중점) 건설폐기물 관련 업체 환경법규 및 수집·운반차량 기준 준수 여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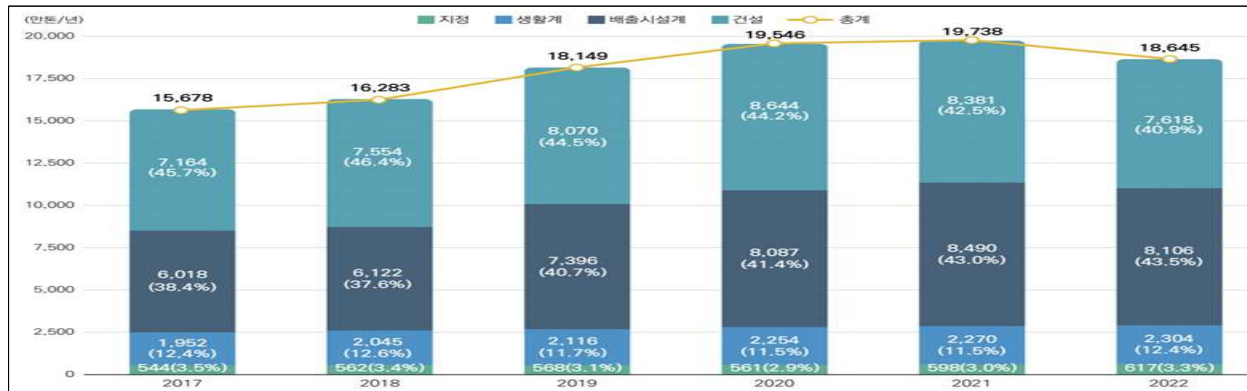
II | 감사대상 업무현황

-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료포함)과 함께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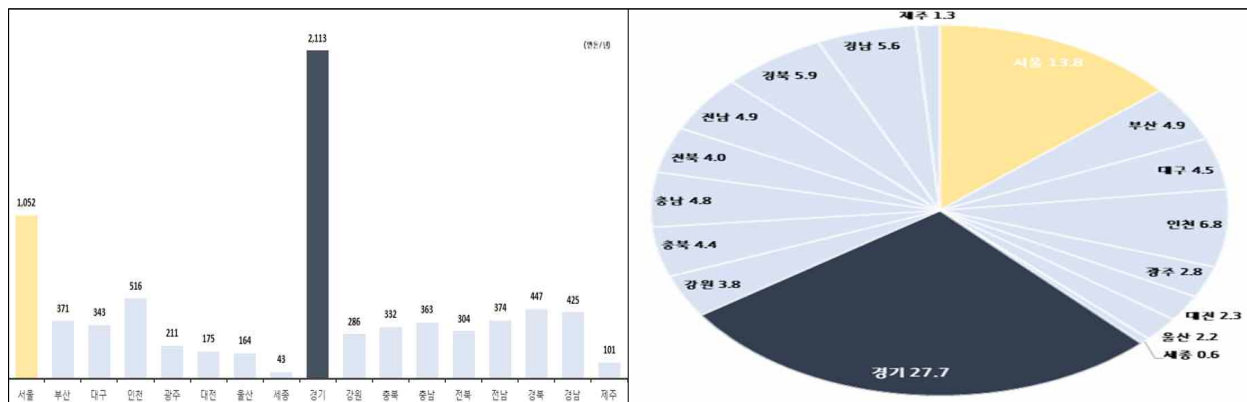
1) 제보내용: ①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건설폐기물 보관, ②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혼합보관, 덮개 미사용)
2) 선정기준: ① 중간처리업과 배출자 많은 시·군, ②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업 있는 시·군

-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건설폐기물 평균 점유율은 44%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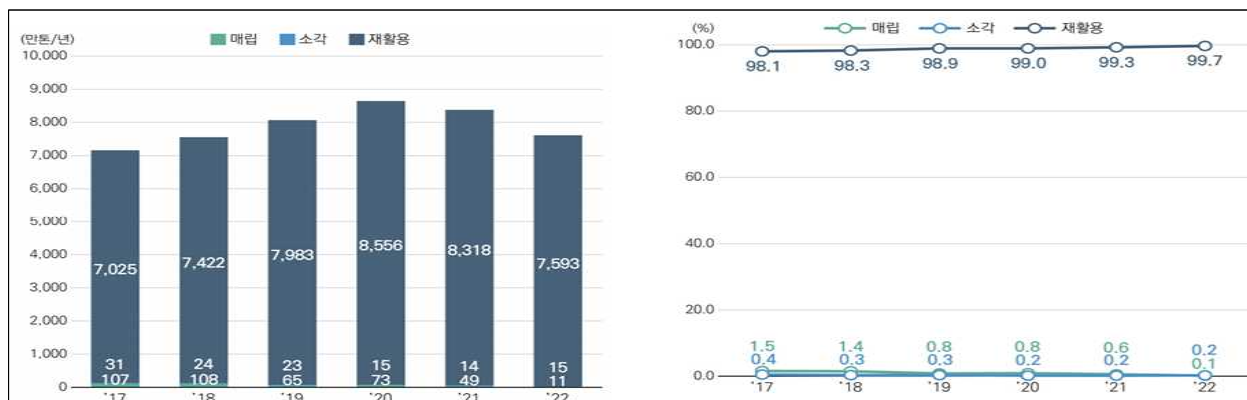
자료: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재구성

- 2022년 전국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7,618만톤이며, 경기 2,113만톤(27.7%), 서울 1,052만톤(13.8%), 인천 516만톤(6.8%) 순으로 발생



자료: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재구성

-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은 2022년도 99.7%로 전년(99.3%) 대비 0.4%p 증가 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처리 방법 중 재활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재구성

1. 감사총평

- 이번 감사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현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³⁾에 대한 현장(표본)감사를 통해 환경 법규 등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관리실태도 함께 확인하였음.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인 공사현장에 대한 감사 결과, 공사현장 9개소 중 2개소가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고, 3개소는 폐기물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도로변에 보관하였음.
- 처리업체의 경우, 36개 업체에서 7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음.
 - ▶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변경허가 없이 확장한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설치, 건설폐기물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보관표지판 미 설치, 임시보관장소 승인용적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 보관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등
 - ▶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배출시설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 선별(자력)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조에 물을 담아 순환골재와 목재 등을 분리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없이 선별시설 또는 파쇄시설 등을 증설 또는 폐쇄하거나 신고된 소재지가 아닌 소재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등
 - ▶ (불법건축물 및 산지훼손) 사업장 부지 주변 산지를 확장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 신고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증축·축조하여 사무실 및 식당 등으로 사용하거나 가설건축물 창고를 설치하여 물건 적치.
- 또한 동일차량으로 2개 이상의 처리업에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차량 197대가 135개 업체로부터 수집·운반증을 중복으로 발급받았으며, 수집·운반업을 받은 55개 업체에서 차량 106대를 무단 감차하였으며, 이 중 37개 업체는 허가 기준(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3) 건설폐기물 처리업: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또는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

2. 지적사항 총괄

○ 처분요구 : 행정상 11건 (시정 6, 주의 2, 통보 3)

(단위: 건)

연번	처분명	처분건수 (지적건수)			
		합계	시정	주의	통보
	합 계	11 (69)	6 (30)	2 (7)	3 (32)
1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업무 소홀	1 (3)	1 (3)		
2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 관리 업무 소홀	2 (31)	1 (6)		1 (25)
3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 신고 등 업무 소홀	1 (13)	1 (13)		
4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업무 등 소홀	1 (3)	1 (3)		
5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업무 소홀	1 (4)	1 (4)		
6	방지시설의 설치 업무 소홀	1 (1)	1 (1)		
7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한 관리 업무 소홀	2 (6)		1 (3)	1 (3)
8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 업무 소홀	2 (8)		1 (4)	1 (4)

【기관별 지적건수】

(단위: 건)

연번	기관명	지적건수			
		합계	시정	주의	통보
	합 계	69	30	7	32
1	수원시	2	1		1
2	용인시*	5	2	1	2
3	성남시	2	1		1
4	화성시*	10	5	2	3
5	부천시	2	1		1
6	안산시	2	1		1
7	평택시*	10	5	2	3
8	안양시	2	1		1
9	시흥시	2	1		1
10	김포시*	7	4	1	2
11	광명시	2	1		1
12	하남시	1			1
13	군포시	1			1
14	안성시	1			1
15	의왕시	1			1
16	과천시	1			1
17	고양시*	4	3		1
18	남양주시	1			1
19	파주시*	5	2	1	2
20	의정부시	2	1		1
21	양주시	2	1		1
22	구리시	1			1
23	포천시	1			1
24	동두천시	1			1
25	연천군	1			1

* 건설폐기물 처리업 현장감사 6개 시(용인, 화성, 평택, 김포, 고양, 파주)

3. 주요 지적사항

NO.1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업무 소홀

<시정>

□ 「건설폐기물법」 제22조 및 제63조에 따라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업 등 4개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 사업장 부지 확장 등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표 1] 및 [사진 1]과 같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허가받은 부지와 접해 있는 부지를 확장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거나 건설폐기물 시설·장비로 허가받은 세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송 등),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 없는 생산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

[표 1] 건설폐기물 변경허가 위반내역 : “생략”

[사진 1] 건설폐기물 변경허가 위반 현황 : “생략”

조치
사항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시정)

- 「건설폐기물법」 제13조 및 제66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66조에 따라
-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표 2]와 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함.

[표 2]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기준과 방법

구분	처리기준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함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가설건축물 중 임시창고에 보관(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 설치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

-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III.-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해설] 7.에 따르면 동일차량으로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2 이상의 처리업에 대한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업 등 25개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 ○○○기업 등 3개 업체는 건설 생활폐기물에서 분리된 폐기물을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운반하여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날려 유출되게 보관하였고,
- ◇◇기업 등 25개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보관시설 외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 중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처리기준 위반함.

- 또한, 동일차량 197대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135개 업체로부터 수집·운반증을 중복으로 발급받음.

[사진 2] 건설폐기물 기준과 방법 위반 현황 : “생략”

[표 3] 폐기물 기준과 방법 위반내역 : “생략”

[표 4] 건설폐기물 기준과 방법 위반내역 : “생략”

조치
사항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보관기준 등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하여 고발하고, 「건설폐기물 법」에 따라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25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시정) 수집·운반증 중복등록 135개 업체에 대하여 반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행정조치 (통보)

□ 「건설폐기물법」 제22조 및 제66조에 따라

- 건설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 통보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장비(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에도 변경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위반한 자에게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31개 시·군의 수집·운반업 차량 소유를 확인한 결과

-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받은 554개 업체 중 55개 업체에서 106대의 차량 소유자가 변경되어 운반차량이 감차되었는데도 변경 전에 변경신고를 득하지 않았으며, 무단 감차로 인해 37개 업체가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

[표 5]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무단감차 및 허가기준 위반내역 : “생략”

조치
사항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55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 (시정)

□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면 아니 되며, 수집·운반을 위한 임시보관장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과 승인조건, 보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업 등 8개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 적정 보관 장소 외 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거나, 보관용적 승인기준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임시보관장소에서 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 선별·분리 작업을 함.
- 또한, 승인받은 임시보관대상 외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 외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함.

[표 6]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위반내역 : “생략”

[사진 3] 임시보관장소 위반 현황 : “생략”

조치
사항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승인기준 등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 (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제90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제76조에 따라
 -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⁴⁾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⁵⁾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업 등 8개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 △△기업 등 3개 업체는 설치신고 없이 신규로 대기배출시설인 선별(자력)시설을 설치하거나, 순환골재 등을 생산하면서 수조에 물을 담아 목재 등을 분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 ▽▽기업 등 8개 업체는 변경신고 없이 신고된 동종 대기배출시설인 분쇄시설 등을 증설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인 세륜시설을 신고된 소재지가 아닌 소재지에 설치하여 사용.

[표 7] 배출시설(대기 및 폐수) 위반내역 : “생략”

조치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신고 위반 3개 업체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변경신고 위반 8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시정)

4) 설치기준: (대기) 동일배출구에 이중시설 설치 또는 다른배출구에 신규 시설 설치 / (폐수) 새로운 배출시설 공정 설치

5) (대기)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 / (폐수)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89조에 따라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이 포함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또한, 위반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 건설폐기물 선별시설(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한 후 배출하도록 인허가를 받았으나, 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 선별시설과 방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표 8] 대기방지시설 설치 위반내역 : “생략”

[사진 4]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연결하지 않은 위반 현황 “생략”

조치
사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시정)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40조, 제44조 및 제55조에 따라

-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구역 경계를 표시한 후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 등을 할 수 있음.
- 그리고, 복구의무자는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보전산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전산지 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기업 등 3개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사업장 부지와 접해 있는 산지를 확장하여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또는 컨테이너, 중장비, 토사 등을 보관.

[표 9] 불법산지전용 위반내역 : “생략”

조치
사항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위반 3개 업체에 대하여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 (주의·통보)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제19조 및 제79조에 따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지자체에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그런데 ♣♣기업 등 11개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허가(신고)받지 않고 사무실, 기숙사, 창고 등을 불법 증축·축조하거나 사무실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등 허용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표 10] 위반건축물 등 위반내역 : “생략”

조치
사항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등을 하지 않은 11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주의·통보)

[표 11] 도민감사관 활동내역(의견)

도민감사관	활동내역(주요 의견)
A (도시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9.6) ㄱ 건립사업 등 4개 현장 건설폐기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건설폐기물 보관 등 준수사항 이행실태 확인 - 세륜세차시설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가 5톤 이상일 경우 위탁폐기물 추가 안내
B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9.10.) <<기업 등 4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환경분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보관장소 폐기물 보관장소 보관상태 등 관련 법규 이행실태 확인 - 폐기물 보관시설 보관표지판 부실한 내용 또는 미부착한 사항 확인 ○ (화성/9.26) >> 등 4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환경분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처리기준 및 등 관련 법규 이행실태 확인 - 보관장소 외 폐기물 보관 및 표지판 미부착한 사항 확인

[사진 5] 도민감사관 활동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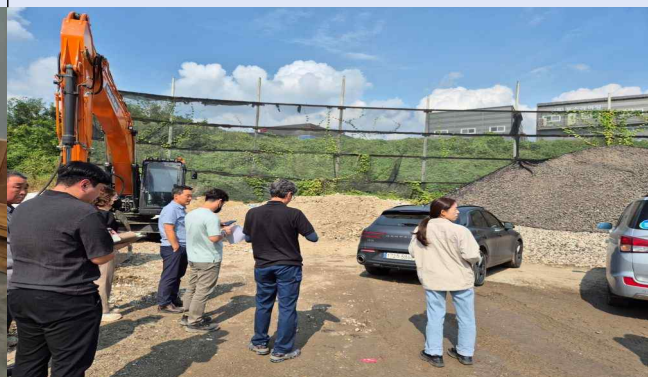
(용인/9.6.) ㄱ 건립 현장 점검



(평택/9.10.) <<기업 중간처리업 현장 점검



(화성/9.26.) ●●기업 현장 점검



(화성/9.26.) >>기업 현장 점검

V

향후계획

- 금번 특정감사 결과를 해당 시에 통보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특정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파
- 건설폐기물 특정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

- 붙임 1. 현장조사 확인사항 1부.
2. 동일차량 수집·운반증 중복등록 현황 1부. 끝.

붙임 1

현장조사 확인사항 “생략”

붙임 2

동일차량 수집·운반증 중복등록 현황 “생략”